

또 이음새 파손...광주 어등대교가 불안하다

‘교량 잇는 틈니 모양 구조물’ 지난달 이어 3년동안 네 차례 발생 광주시 “대형차량 이동 많아” 전문가들 “충분한 시간 두고 보수를”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를 잇는 어등대교의 이음장치 3년만에 네 차례나 파손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어등대교(시청 방면) 2차로에서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됐다.

신축이음장치는 틈니 모양으로 맞물려 교량 사이를 잇는 구조물로, 온도가 높은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드는 특수교량(케이블로 다리 상판을 공중에 매단 형태의 다리)의 특성에 따라 다리 상판을 신축성 있게 이어주기 위해 설치된다.

이날 사고로 교량 위를 지나던 차량 1대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출근 시간대에 차로를 폐쇄하고 수리 작업이 진행돼 어등대교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광주시는 오전 6시 50분께 ‘어등대교 2차로 신축이음장치 파손으로 긴급 복구 중으로 교통이 정체되고 있다’는 안내문자를 전송하고 어등대교를 우회할 것을 안내했다.

광주시는 14시간여에 걸쳐 수리 작업을 한 끝에

이날 오후 5시께 보수 공사를 마쳤다.

문제는 최근 같은 장소에서 수 차례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어등대교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 신축이음장치 파손 사고가 났다.

지난 2022년에는 11월과 12월 2차례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됐으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일에도 파손됐다. 파손된 형태는 콘크리트 균열, 박리, 탈락 등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어등대교의 하루 차량 통행량은 15만 6560대다. 더구나 어등대교의 제한 최고 속도가 시속 80km여서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시민들은 “언제 파손될 지 모르는 도로를 고수으로 달려야 하는데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어등대교에 대형 차량의 이동이 잦아 반복적인 파손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어등대교가 평등산단과 기아자동차광주공장 사이 길목에 있어 대형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데, 차량

의 무게에 비례한 충격으로 파손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광주의 또 다른 특수교량인 운남대교의 경우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적고, 그만큼 파손 사고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교량 구성장치 파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이 수사·상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수작업을 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축이음장치 파손을 줄이기 위해선 단 한차례 시공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며, 점검 횟수 또한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터라 수리·점검을 강화하는 것 외에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의산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특수교량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이어서 제조, 설치, 관리상의 문제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주체인 지자체장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신축이음장치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3년새 4건이나 발생한 만큼 6개월마다 진행되는 정기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하거나, 수사·상시 점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교량유지관리의 일반적 방법인 IoT(사물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들이 21일 광주시 광산구 어등대교(시청 방면) 2차로에서 파손된 신축이음장치를 보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터넷) 센서를 부착해 원격으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 교통 불편을 우려해 최대한 빠른 시공을 하려 하다보면 제대로 된 시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시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당분간 차로를 폐쇄하고 우회로를 이용하게 하는 등 꼼꼼하고 세밀한 보수·교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신문용지 가격 짹짹’ 3개 제지사, 과징금 305억

‘물량 줄인다’ 유력신문 협박도...신문사 제작 단가 상승 초래

신문용지 공급시장을 독점한 3개 업체가 가격 짹짹했다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유력 신문에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고 압박해 가격 인상을 관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제지·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에 시정명령과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은 지난해 2870억원 규모로, 3개사 합계점유율이 100%다.

공정위는 가담 정도가 심한 ‘업계 1위’ 전주제지·페이퍼에는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전주제지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600만원이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3개 신문사 등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11당 가격을 12만원으로 기존 대비 16%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국내의 신문폐지를 구입해 신문용지를 생산한다. 그런데 신문 폐지 수입량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비용 상승이 겹치자 수익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회피하려고 담합을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회사 영업담당자들이 신문사 주변에서 직접 만나거나 텔레그램, 전화 등으로 얘기를 나누는 등 최소 9차례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 공문에 기재하는 인상 시기와 금액을 서로 다르게 기재하기도 했다.

반발하는 3개 신문사에는 공급량을 50% 줄이겠다고 통보하는 등 실행해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담합은 신문 제작 단가 상승, 종이 신문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국민 부담을 높였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로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담합 기간 종이신문의 월평균 구독료는 21.52%(1560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환뉴스

“알권리 침해”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를

시민단체 요구...양부남 의원 “악성 민원서 공무원 보호 목적”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 을)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양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개정안)’은 시민의 권리를 정부가 검열하겠다는 ‘알 권리 침해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판단을 거쳐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준이 모호해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보 공개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며 “개정안이 종결

처리 가능하도록 규정한 ‘반복 청구’와 ‘대량 청구’ 역시 기준이 불분명해, 정보의 성격에 따라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이 필요한 경우에도 청구를 거부할 구실을 준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은 악성 정보공개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을 뿐 국민의 알 권리 침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최근 3년간 상위 10명이 청구한 건수가 118만 7670건에 달해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일부 청구인이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행사장 30곳 중 29곳 1회용품 사용

광산구 ‘이주민의 날 행사’ 최다배출

광주지역 행사장 30곳 중 29곳에서 1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달여간 광주에서 진행되는 행사 및 축제 3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다.

조사 결과 30곳의 행사장 중 29곳(97%·7284개)

에서 1회용 종이컵이, 28곳(93%·3438개)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리배출함이 설치된 곳은 10곳(33%)이었으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혼합된 경우도 전체 행사장의 67%에 달했다.

1회용품이 가장 많이 배출된 행사는 ‘광산구 이주민의 날 행사’, ‘광산구 송정남도 맛 페스티벌’, ‘남구 군분로 야시장’이었다. 이들 행사는 먹거리 부스가 추가 되는 행사였으며, 규모가 큰 행사일수록 한꺼번에 너무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면서 분리

배출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1회용품이 가장 적게 배출된 행사는 ‘북구 그라제 축제’, ‘북구 운암1동해오름 축제’, ‘동구 프린지 페스티벌’ 등이었는데, 쓰레기 배출량 자체가 적거나 텀블러, 장바구니, 에코백 등을 사용하려는 시민들이 많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치가 있지만 1회용품은 여전히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행사 주관기관은 참여자와 부스 운영자에게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하고, 분리배출함을 필수로 설치해 혼합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인 기자 kdi@

전남지노위 ‘GGM 부당행위’ 일부 기각에 노조 반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건 등을 기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지노위가 GGM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보직해임건 등을 기각했다”면서 “전남지노위는 기계약 종업이 아니라 법에 따라 임정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올해 7월 2일 4차 교섭부터 16차 교섭까지 4개월간 사측에서 ‘회사 밖에서만 교섭을 해야 한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

한 교섭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노위가 GGM측이 1-3차 교섭에 불참한 것에 대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바 있으나, 4차 교섭부터 16차 교섭은 기각한 것은 GGM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지노위가 노조탄압에 나선 사용자 편향 판정을 계속한다면 노동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전남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9%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믿음이 주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